

낙농체험 관광사업에 2012년까지 20억 투입, 희망목장 모집

농림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낙농체험 관광사업 희망목장을 모집한다. 낙농체험 관광사업은 도시민의 낙농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12년까지 총 2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선정된 목장은 체험목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험시설 설치비 및 환경개선비를 개소당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매년 4개 목장을 선정 총 20개 목장이 낙농체험 관광사업을 위해 육성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이자 그동안 낙농체험여행을 시작, 주도해온 낙농진흥회는 "이번 사업에 동참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각 시·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며 "접수된 목장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면담을 거쳐 향후 구성될 '낙농체험 관광사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2월말까지 확정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용 낙농진흥회 담당 부팀장은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춘 곳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며 "지자체나 낙농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깨끗한 목장' 또는 '아름다운 농장' 선정경험이 있으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낙농체험 관광사업의 시행지침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www.dairy.or.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낙농진흥회 홍보팀(02-6007-5546)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림부, 해외 곡물생산기지 건설 검토

정부가 치솟는 곡물가에 대비, 안정적인 곡물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등지에 곡물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부는 지난 8일 대회의실에서 '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 TF'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대책을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도 국제 곡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국제시장에서 안정적인 곡물 확보 능력을 제고하고 위해 러시아·남미·동남아에 토지 임차 등을 통한 곡물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식량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비축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실수요업체(밀·옥수수)의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용중인 콩 등 TRQ(저울관세할당물량) 품목의 상시비축량도 증량키로 했다.

단기대책으로는 올 하반기까지 밀·옥수수 등 수입곡물에 대한 할당관세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1년말까지로 늘리기로 하는 한편 세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배합사료 가격 안정 대책으로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지난해 517억원에서 839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조건도 1년 일시상환에서 2년 일시상환으로 완화시켰다. 또 조사료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2015년까지 2007년84만톤의 절반수준인 42만톤으로 축소키로 했다.

오르고 또 오르는 사료값, 대책 없나

새해 초부터 배합사료값이 또 올랐다. 일부 대형 업체는 국제 곡물값 급등과 해상 운송료 상승 등에 따른 원가부담을 이유로 이미 사료값을 전격 인상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인상폭과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꿈틀대는 사료값**=국내 1위 사료업체인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를 비롯해 일부 대형 사료업체들은 지난해 12월 말 사료값을 올려 올 1월부터 적용



하고 있다.

축종별로 인상된 사료값을 보면 비육우용의 경우 1kg당 평균 24~25원, 양돈용은 26~28원, 양계용은 30~32원씩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중소 사료업체들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조만간 평균 7~8% 내외로 사료값 인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배합사료값은 지난 2006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35%가량 인상된 셈이다. 문제는 사료값이 올 상반기 안에 한두차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곳곳에 인상요인**-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곡물 소비가 크게 늘고 있고, 고유가에 따라 미국·유럽·일본 등이 바이오연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원료가 되는 옥수수 등 곡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옥수수 1t당 국제 시세는 지난해 하반기 235~240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니 새해 들어서는 315달러까지 치솟았다. 밀 1t 값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10%가량 상승한 상태다.

특히 중국이 올해 1년간 옥수수·콩 등 57개 곡물에 대해 5~25%의 수출세를 부과기로 하는 등 곡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바이오연료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국제 곡

물값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료용 곡물의 국제 해상운송비도 크게 오르고 있어 사료업체들의 원가는 지난해 50달러 수준에서 100달러 가까이 뛰었고, 중국과 인도에서 들어오는 곡물 운송비도 50% 이상 올랐다.

◆**양축농가, 경영에 악영향**-배합사료값이 오르게 되면 축산농가 경영비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입 축산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현실에서 축산농가의 경영비가 늘어날 경우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악화돼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축산물 생산비(2006년 기준) 가운데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우 비육우 27.2%, 한우 송아지 38.6%, 비육돈 45.6%, 달걀 48.9%, 육계 50.5% 등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수출국 요구하는 지역화 인정' 농고 논란

농림부가 축산물 수입위험분석 요령을 제정하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축산물 수출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화 인정' 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입안예고한 '지정 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정안의 제11조에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수출국의 지역화 인정 요청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축산물 수출국이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화를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이번에 제정한 요령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이 각 주마다 지역화를 요구하면 개별 주와 각각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역화가 인정될 경우 이웃 주에서 수출한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부

●● 농축산소식

험물질(SRM) 검출 등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금지 등의 조치는 해당 주에만 내려지게 된다.

특히 이 고시의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수입위험 분석은 해당 진행단계에서부터 이 고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도 협상 자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호 농업통상 전문 변호사도 "이번 요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이 지역화를 요구한 바 있어 궁극적으로 FTA 국회비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위생검역 권한이 지역화로 약화되면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에서도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축사 현대화자금 '무용지물' 될라

정부가 올해부터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키로 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예상된다.

농림부는 올해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를 위해 총 515개소 1286억60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조건은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이다.

그러나 현장의 농가들은 시설자금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금이 필요한 농가들 대부분이 시설이 노후화 돼 신축을 해야 하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높은 땅값으로 신축이나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대다수의 농가들이 과거 농장이나 토지를 담보로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터라 담보능력도 전무하다. 여기에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가의 현실을 감안해 신축 축사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담보인이 이를 인정해 줄 것인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젓소 송아지 유통 '숨통' 트이다

농림부는 이 송아지에 한해 검사증명서 유효기

간을 4개월로 조정하는 등 개선책을 발표했다.

농림부가 밝힌 젓소 송아지의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발급 관련 보완사항에 따르면 현행 2개월인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젓소 송아지에 한해 4개월로 조정하고 구매자 변경시마다 이뤄졌던 재검사 및 검사증명서 발급도 거래 2회까지 재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다.

다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서식에 유효기간 및 거래에 따른 구매자를 2명까지 표기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젓소 송아지의 거래 형태가 초유떼기(생후 1주일), 분유떼기(2~3개월)로 정형화돼 있고 분업화된 사육형태와 단순한 거래 구조(2단계) 등을 감안할 때 현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했다고 개선사유를 밝히고 있다.

낙농육우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문제가 됐던 젓소 송아지의 유통이 숨을 트게 됐다"면서 "다만 브루셀라병 발생시 추적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자 이름을 쓰는 것이고 수집농가 두 곳 이상을 거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산축협 원유집유장, 신축공사 기공식 갖고 시설 현대화 착수

아산축협(조합장 맹준재)의 역사와 함께해 온 원유집유장이 신축공사에 들어가 새롭게 탄생한다. 아산축협은 지난 16일 아산시 염치읍 경제사업장 현지에서 전임 조합장과 임직원 및 축산작목반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유집유장 신축공사 기공식을 갖고 대대적인 시설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원유집유장 신축공사에는 도비 1억8천만원, 시비 3억6천만원, 농협중앙회 1억250만원의 보조와 자부담 5억7천50만원 등 총 12억1천300만원이 투입된다. 아산축협 원유집유장은 대지면적 2천367평에 191평 규모로 신축된다. 집유장 건물 1층은 원유냉각

시설과 경제사업장으로 사용되고 2층은 가족병원과 임상병리실 등이 들어선다. 또한 2만㎏ 급 저유조 2개와 CIP시설 및 일일 40톤 처리능력의 폐수처리장이 설치된다.

한국낙농육우협, 북한 어린이 우유 지원 등 건의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내고 우유 학교급식 의무화와 북한 우유 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낙농육우협회는 이 건의문에서 학교급식 의무화가 이뤄지면 초등학교의 경우 하루 200l의 원유가 추가 소비되고 중·고등학교의 급식비율을 50% 수준까지 늘리면 하루 420l의 원유가 추가소비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우유지원과 관련해서는 멸균유 지원으로 시유 공급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원유 공장 설립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낙농육우협회의 관계자는 “현재 농림부의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에게 우유급식비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의무화가 시급하다”며 “또 100만여명의 북한 초·중·고생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것은 민족 화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문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초 건국대 축산대학 신년회 특강에서 “학교급식 식단에 의무적으로 우유를 포함하고, 북한의 초·중·고생에게 우리 우유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한나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에 포함한 내용으로 낙농가와 유업계의 폭넓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홍문표 의원실 보좌관은 “우유 학교급식 의무화와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 등은 인수위 차원에서 마련하는 정책안”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해 정

책을 마련하고 통일외교분야 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해야 하는 문제로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미 쇠고기 전면개방 총대 댄나

농림부가 최근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출, 미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해 총대를 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여러 차례 발견된 것은 미국의 수출검역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 정부가 이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태어난 지 30개월 미만된 소에서 나온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연면제한조치를 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 사실상 전면개방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변은 1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뼈가 수출된 원인에 대해 미국 측 공식보고서에는 ‘작업장에서의 포장 공정 통제 실패’ 및 ‘작업장의 포장과 전환구역에서의 효과적 관리통제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돼 있으나 주미한국 대사와 농림부는 파손박스 교체과정에서의 혼입이라고 발표, 사실상 미측의 통제 실패나 수출검역 증명제도의 문제점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1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주미대사 보고는 미 농업부의 조사보고서를 본국 정부에 단순 전달해 온 내용으로 주미대사나 농림부가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농민신문, 농어민신문)